

균형발전 후퇴 안된다

전국 71개 단체, 수도권 규제 완화 정면 대응

‘전국회의’ 결성... 혁신도시 대책 등 건의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수도권과밀 반대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광주광역시 구정장협의회, 전남시군지역혁신협의회 등 전국 71개 단체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혁신도시를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6일 오후 3시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장에서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를 결성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폐기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면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완화와 혁신도시 재검토 등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이고, 재정분권을 위한 법 개정, 지방 인센티브 대폭

확대 등 지방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광역경제권 지역주도 추진, 혁신도시 획기적 보장추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전국 71개 단체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혁신도시를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비수도권은 겹대기만 남게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전체의 대응 방침을 밝히고, 지역 주도의 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관련한 정부 부처, 수도권기관·단체와의 토론회 ▲각 정당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토론회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지역별 1만인 집회 개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반대하는 보도행태를 보이는 일부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구독거부 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수도권 기관·단체들과 대타협을 도출하는 계기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정한진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사무차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나 공공기관의 민영화 이후 혁신도시 이전 추진 등은 수도권 과잉집중에 이어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전국회의를 계기로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80년 5월 광주 짓밟은 계엄군 탱크



1980년 5월 27일 낮 광주에 투입된 제 20사단 탱크부대가 광주 진압작전을 마친 후 도심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 사진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에서 취재했던 이창성(65) 전 중앙일보 사진기자가 28년만에 공개한 사진집에서 발췌한 것이다.

“5월 단체 정치적 변질 반성해야”

정수만 5·18 유족회장 본보 인터뷰

5·18 이후 지난 28년동안 기념행사를 주도해온 ‘5·18 광주민중항쟁’의 산 증인인 정수만(60)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5월 단체가 정치적으로 변해간다는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순수 5월 단체로 남아야 한다”며 “제발 5월 단체를 정치적 발판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7·20면〉

정 회장은 자신이 사실상 ‘상주’(喪

主) 역할을 해왔던 5·18 기념행사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잠적해 그 배경을 놓고 갖가지 소문과 억측이 쏟아졌다. 광주일보보는 지난 14일 광주 모병원에 입원 중인 정 회장을 만나 심경을 들어봤다.

정 회장은 “정치와 운동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5월 단체는 관련되는 일만 해야한다. 하지만 간혹 이에 벗어나는 일을 하려고 한다. 단체간 신뢰가 무너졌고 구조적인 문제도 많다”며 “이젠 5월 관련 단체를 떠나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5월 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기념행사도 5월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순수 민간단체에서 해주게 좋겠다”고 지적하고 “행사가 정치적으로 흐를 경우 5월의 대중정신이 퇴색된다. 우리가 80년 5월 당시 이해관계를 따지려고, 정치적으로

로 이용하려고 거리로 나섰다”고 반문했다.

정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문제와 관련 “기념행사는 5월 영령과 5·18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므로 기념식만은 잘 치르도록 하면 좋겠다”며 “지나해와 지난 2003년과 같은 일이 재발돼선 안 된다. 표현은 자유스럽게 하되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 회장은 이번 5·18 28주년 기념행사의 주제인 ‘5월의 희망으로 세상을 보라’와 관련, ‘5월에 희망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단체간 마찰이 잦고 5월을 알리기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며, 미래의 5월을 짊어질 젊은 청년들은 관심이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외국인 노동자 실태 탐사 보도 아시아 국가 현지취재 제 3신



한국 입국이 확정된 베트남 노동자들이 지난 14일 베트남의 ‘사전교육’ 시설인 노동건설전문기술대학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를 듣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300대 1 관문 통과 “한국행 벌써 설레요”

하노이=최경호 기자

“300대 1의 관문을 뚫고 우리는 한국행 티켓을 쥐었습니다”

지난 1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47명의 수강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었다.

이들은 베트남 당국이 최근 실시한 한국행 노동자 선발시험에 통과한 뒤 한국 기업들로부터 취

처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100km 가량 떨어진 ‘사전교육’ 시설은 베트남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취업 요람’으로 통한다. 이곳을 거쳐야만 한국과 일본, 대만 등 급여나 근무조건이 월등한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04년 8월 실시한 한국행 노동자 선발시험에 통과한 뒤 한국 기업들로부터 취

노동자 시험 통과 베트남 청년 47명 부푼 꿈

업 확정통보를 받은 남녀 청년들이다. 시험 응시자가 무려 1만4천 552명이었으므로 300대 1이 넘는 엄청난 경쟁을 통과한 우수인력들이다.

이들은 한국 입국을 앞두고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갖은 고생 끝에 한국에 시험과 건강검진 등의 ‘관문’을 통과했지만 누구보다 빨리 한국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현재 베트남에선 노동자들의 한국 송출을 앞두고 70시간에 걸

추세다.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가 크게 개선 필요로써 현지인들 사이에서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반면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집하고 있어 베트남인들의 선호도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산업연수생제의 경우 급여가 낮는데다 인권유린 사례가 자주 베트남에 알려지고있기 때문이다.

〈2면으로 계속〉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53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제전·전국대회